

The Politics of Respect for labor and

Roh Hoe-Chan's 6411 spirit

Kim, Yun Cheo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political and historical resources for the transition to a labor-respecting society. This is part of a discourse practic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Korean democracy, which is called 'without labor democracy.' In particular, this paper focuses on Roh Hoe-Chan's progressive party activities and the 6411 spirit as a representative case studies. To this end, this paper utilizes containing Roh Hoe-Chan's remark, evaluation of Roh Hoe-Chan, and interviews with those who worked with him. Through this, this paper confirms that Roh Hoe-Chan's progressive party activities had to overcome the limits of organized labor and political factional forces, but were in a dilemma that had to be based on them. In addition, the 6411 spirit confirms that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nifestation of a humanistic politics equipped with reflection, re-emphasis on human dignity and narrative in order to resolve such a dilemma.

Key Words: Respect for labor, Roh Hoe-Chan, Subject formation, the 6411 spirit, Humanistic politics

노동존중의 정치와 노회찬의 6411 정신

김윤철*

요약: 이 논문의 목적은 노동존중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진보)정치사적 자원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는 '노동 없는 민주주의'로 일컬어지는 한국 민주주의의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한 담론적 실천의 일환이다. 특히 이 논문은 대표적 사례 연구 차원에서 노동존중을 기치로 내걸었던 노회찬의 진보정당 활동과 6411 정신에 주목하고, 그것의 특성과 의미를 포착코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노회찬의 발언과 그에 대한 평가가 실린 문헌, 그리고 함께 활동했던 이들에 대한 인터뷰 자료를 활용한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노회찬의 진보정당 활동이 조직노동과 정파운동세력의 한계를 벗어나야 하지만 그것에 기반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처해 있었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6411 정신은 그러한 딜레마의 해소를 위해 성찰성과 인간존엄성에 대한 (재)강조, 그리고 서사성을 장착한 인문정치의 발현이라는 특성을 지녔음을 확인한다.

주제어: 노동존중, 노회찬, 주체 형성, 6411 정신, 인문정치

* 경희대학교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Kyung Hee Univ., Email: gazeman@naver.com)

I. 들어가며

한국의 민주주의는 최근 'K-Democracy'라는 성공담론마저 등장시켰지만(이원영, 2021), '노동 없는 민주주의'라는(최장집, 2013) 비판적 평가를 받아 왔다. 이는 정치적 대표체제(정당체제)가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대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의 정치세력화를 기치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표하려는 진보정당이 존재하고 있으나, 민주화 이후 2004년 17대 총선을 통해 원내진출에 성공한지 17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군소정당에 머물러 있다. 그런 중에 2016-2017 촛불집회라는 대중운동적 에너지에 힘입어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노동존중 사회의 건설'을 표방하기도 했다. 진보정당이 노동의 정치세력화를 시도했던 것이나, 문재인 정권이 노동존중 사회의 설을 표방했던 것이나 모두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자본과 노동의 지배-피지배적 관계 혹은 힘의 관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노동의 주권자적 지위 구현에 기초해 공화적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치적 시도는 아직까지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1990년대 이후 -특히 IMF 위기 이후-극심해진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이와 동반한 정치적 불평등의 심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김윤철, 2020).

이러한 작금의 정치경제적 현실은 다시금 진보정당에 눈길을 돌리게 한다. 노동존중의 사회가 정치를 통해서만 만들어지고 재생산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할 때 특히 그렇다. 또 가장 일관되게 노동존중을 기치로 내건 정치세력이 진보정당임을 감안할 때도 그렇다.

이를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민주화 이후 한국의 진보정당 건설과 제도화를 주도했던 노회찬의 정치활동 사례에 주목해, 노동존중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치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특히 노회찬의 6411 정신에 초점을 맞추도록 할 것인데, 노회찬의 죽음 이후 그의 계승자들이 노동존중의 정치를 위한 상징적 연표와 언술로 등장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노회찬의 6411 정신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맥락과 그것의 특성과 의미를 파악하면서 노동존중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치사적 자원으로서의 가능성과 제한성이 무엇인지를 포착해보고자 한다.

II. 노동존중의 '정치개념적' 이해와 '노회찬 사례'의 유의미성

노동존중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이룬다. 노동이 바로 근·현대 문명과 정치경제체제에서 ‘민(民)’을 대표하는 (그저 ‘단어’가 아닌) ‘개념’이기 때문이다. 한자로 민은 손이 묶여 정복자-지배자에게 끌려가는 피정복자-피지배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문자이다. 현대 문명 이전의 지배자들은 이들의 노동에 힘입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고 재생산했다. 민주주의는 바로 그런 체제에서 노동을 담당하며 살았던 이들이 주권자가 된 새로운 정치질서 혹은 통치원리였다. 주권자는 민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 스스로가 통치에 참여하는 시민의 위상과 역할을 보유하고 수행하는 주체를 뜻한다. 이때문에 민주주의는 민이 담당하는 노동과 그 노동을 수행하는 민에 대한 존중을 통해 정당성을 획득하는 통치체제이다. 즉, 정치적 윤리-도덕적 측면에서 민주주의가 좋은 체제인 이유는 바로 노동에 대한 존중, 또 그것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민에 대한 존중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본질로서의 노동존중을 구현하는 것은 정치에 달려 있다. 노동존중과 민주주의의 본질적 의미를 공동체 전반에 걸쳐 구현하기 위해 인간적 삶과 공동체의 주요 가치와 제도와 행태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노동약자 등이 주권자가 되고 이들이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을 행사하고 수행하는 실천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는 공동체적 삶의 총체적 원리이자 실천 방식이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2011)가 정치(학)를 최고-최상-의 실천이자 학문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 정치와 정치학이 모두 ‘공동체와 관련된 공적인 일과 실천’의 의미를 갖는 ‘폴리틱스(politics)’로 불리는 이유이다. 그런데 정치가 공동체적 삶의 총체적 원리이자 실천 방식이라는 것은 정치가 본질상 과학이나 공학이 아니라, 인문학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간존엄성의 실현을 위해 인간과 삶의 의미와 그것이 처해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에 바탕하고, 또 그것을 위한 실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이 노회찬 정치활동 사례에 주목해 노동존중의 정치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정치의 인문학적 특성 때문이다. 본문 중의 논의를 통해 확인하겠지만, 노회찬의 진보정당 활동은 정치의 인문성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이었으며, 6411 정신은 그 실천의 도정에서 노회찬과 한국의 진보정당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혹은 판단과 선택의 오류와 한계로부터 드러낸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주목과 학술적 담론화의 시도가 노동존중 사회로의 전환과 (진보)정치와 관련한 기존의 논의들과 구별되는 본 논문의 주요 특징이다. 따라서 노회찬 정치의 사례에 대한 착목이

정치의 인문학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언명은 결코 노회찬과 6411 정신에 대한 찬양을, 또 긍정성에 대한 일방적 강조를 뜻하지 않는다. 심지어 긍정성에 주목할 때조차 그것은 비판적 해석과 계승의 지점을 찾아내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최초의 학술적 담론화, 특히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위한 논의라는 점을 고려할 때, 노회찬 정치의 공과를 균형감 있게 조명하는 것은 보다 많은 논자들의 참여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이 논문은 노회찬 정치, 특히 진보정당 활동이 결국 6411 정신의 등장으로 귀결된 것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공과가 무엇이든 간에, 또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노회찬의 진보정당 활동과 6411 정신은 노동존중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치의 역사적 산물이기에, 또 그것을 계승하겠다는 세력이 존재하기에 평가 이전에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연구 대상이다. 이를 고려치 않고 지금의 시점에서 학문적 객관성과 엄밀성을 따지는 시각은 학문에 대한 형식주의적인 이해일 뿐만 아니라, 논의 대상의 특성을 간과한 몰역사적이고 비현실적인 이해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본 논문은 노회찬의 진보정당 활동과 6411 정신의 특성과 의미를 포착하기 위해 그것이 등장한 역사적 과정과 맥락을 추적하고, 핵심 메시지의 내용과 형식의 특징을 추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노회찬의 발언과 그에 대한 평가가 실린 문헌, 그리고 그와 함께 활동했던 이들에 대한 인터뷰에 기초하였다.¹⁾

III. 노동존중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치주체 형성의 딜레마

1. 한국 진보정당 생성 조건의 특수성과 노회찬의 당 건설 노선

노회찬의 진보정당 활동은 노동존중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정치주체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그의 정치적 삶의 가장 큰 공은 3선 국회의원이었다는 것보다 진보정당의 건설과 제도화를 주도했다는 데에 있다. 노동존중의 정치를 지속할 수 있는 조직적 주체를 형

1) 인터뷰는 진보정당의 당직자와 의원실 보좌관, 정치적 조연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당 기획위원장이었던 박00, 당연구소 소장이었던 조00과 연구기획실장박00, 연구위원 김00, 정무 및 정책보좌관이었던 박00과 박00, 현 노회찬 재단의 기획실장 이00 등이다. 이들 대부분은 1980년대 민주변혁운동 시기 학생 및 정파 운동가들이었으며, 민주노동당 창당 과정에서부터 노회찬과 함께 활동했다.

성했고 남겨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의 특수한 내용과 형식 그리고 성과와 한계가 다음 장에서 살펴볼 6411 정신의 등장을 가져온 역사적 맥락이다.

현재 한국 정치에서 진보정당의 위상은 노회찬의 죽음 이전과 마찬가지로 높지 않다. 2004년 17대 총선을 통해 원내진출에 성공한지 17년이 지난 현재도 한자리수 의석과 지지율에 머물러 있는 군소정당에 불과하다. 또 의제-담론-정책 등의 측면에서 노동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현실화시키고 있느냐는 물음에도 긍정적으로 답하기 어렵다.

한국 진보정당의 성장 지체 현상은 분단(반공주의) 국가와 노동배제적 성장주의 체제, 그리고 양대 정당 우위 구도 등과 같은 진보정당에게 불리한 한국 고유의 역사적-정치경제적 구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요인은 그러한 구조가 산업화-민주화 이후라는 시간적 요인의 작동을 통해 부과한 제약을 고려한 주체 형성(당 건설 노선) 및 성장(지지 확장)을 위한 전략적 실천이다.

한국의 진보정당은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들과²⁾ 다른 시대적 환경과 조건 속에서 생성하고 등장했다는 점에서 특수한 측면이 있다(임현진, 2009). 즉,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대부분은 노동계급이 발흥하면서 계급균열이 지배적 균열로 부각된 상황에서 생성하고 등장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진보정당은 노동 내부가 고용형태-기업 및 사업장 규모-노조 가입 여부-성별에 따라 분화되고, 계급균열이 결코 지배적 균열일 수 없는 상황에서 생성하고 등장했다. 이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노동에(만) 기반할 수가 없음을 의미했다. 또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정당정치와 그것이 주도하는 현대 민주주의 체제가 자리 잡기 이전에 생성하고 등장했다. 이와 달리 한국의 진보정당은 기성 정당들이 주도하는 체제(보수독점 혹은 보수우위 양대 정당체제)가 강고히 자리 잡은 이후 생성하고 등장했다. 특히 보수 양대 정당 중 한 축을 이루는 자유주의적 정당이 민주-반민주 균열 구도에서 민주를, 심지어 민주화 이후에는 진보라고 불리는 역사적-정치사회적 환경에서 생성하고 등장했다. 이러한 한국 진보정당의 특수성은 노동과 진보 개념의 재구성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한국 진보정당의 건설과 제도화를 주도했던 노회찬의 전략적 실천은 어떠한가? 노회찬은 1980년대 반독재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는 ‘혁명’을 꿈꾸었다.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극복할 대안체제와 이념으로서 사회주의를 지향했다(유경순, 2015). 하지만 민주화 이후 그의 실천은 변화를 겪는다. 인민노련과 같은 비합법-비공개 전위-혹은

2)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Sasson(1996) 참조.

혁명적 선진대중-조직에서 합법적이고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조직노선, ‘신노선’으로 전환한 것이다(김윤철, 2017). 한국사회주의 노동자당의 건설과 민중당과의 통합(통합민주당), 진보정당추진위원회, 민주노동당의 창당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치행보는 그러한 노선 전환의 선상에서 수행되었다(조현연, 2009). 이는 앞서 언급한 한국 진보정당의 특수성을 반영 혹은 표출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

신노선은 노회찬의 정치와 한국의 진보정당운동이 러시아 사회주의에서 유럽 사회민주주의로 지향 모델을 변경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 비전과 정책의 측면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강국’에 집중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내걸었던, 이후 진보정당 운동의 모토가 되는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슬로건에 압축되어 있다. 노회찬은 이를 2007년 당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7공화국 건설’이라는 비전으로 구체화하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조직 노선에 있어서는 유럽 사회민주주의에서도 특히 노동조합과의 조직적 결합을 통해 성장한 영국 노동당을 주로 참고했다.³⁾ 독일과 북유럽, 특히 스웨덴의 사회민주당 사례도 참고했다.

이때 노동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이고, 주권을 행사해야 하는 시민임에도 차별받고 배제되고 소외된 서민-약자-비통한 자들의 다른 이름이다. 해고 노동자, 동일 노동을 하면서도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여성, 유령 취급을 받는 청소노동자, 철거민, 미래를 상실한 청년이다(노회찬, 2019). 이는 노동중심 개념의 시대적 확장이며, 재 구성에 다름 아니다.

이와 관련 그가 국회의원 당선 이후 헌법 공부를 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⁴⁾ 헌법은 사회구성원을 본원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과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헌법은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고 있기에 이념과 진영을 떠나 모든 정치사회세력이 바탕하고 있으면서 서로 간에 소통을 가능케 해주는 공통의 인식체계 및 언어이다.

2. 한국 진보정당 주체형성의 딜레마와 ‘노회찬 노선’의 한계

그런데 노회찬은 ‘노동중심성’을 강조하며⁵⁾ 민주노총과 같은 조직노동을 중심으로 진

3) 이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주대환에게서 확인한 바 있다.

4) 이는 의원보좌관을 지낸 박00가 확인해주었다. 노회찬은 포켓형 소책자로 된 헌법을 가지고 다녔으며 그것을 출판해 배포하기도 했다.

5) 이는 민주노동당 초기 기획위원장직을 맡아 활동했던 박00이 확인해주었다.

보정당을 건설했다. 여기서 바로 노동존중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치주체 형성의 딜레마가 발생했다. 즉, 재구성한 노동개념에 입각해서는 현실적으로 진보정당을 건설할 기반과 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고, 조직노동에 기반해 진보정당을 건설하면 재구성한 노동개념을 당장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노회찬의 선택은 전자였다.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적 자원을 동원해야 빈민, 농민, 청년 등 1980년대 반독재민주변혁 운동과정에서 성장한 기층 민중운동 또한 결집시킬 수 있고, 그래야 진보정당이 실체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단과 선택에 기초해 만들어진 진보정당이 바로 바로 민주노동당이였다.

조직노동에 기반해 진보정당을 건설한 것에는 단지 현실적 이유만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긍정적 시각에 기초한 것이기도 했다. 노회찬은 1987년 7,8,9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역사를 낙관할 수 있게 되었고, 노동에 대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이런 노회찬에게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조직노동은 이미 진보정당의 엄연한 구성원으로서, 소외된 노동을 진보정당의 이름으로 함께 지켜낼 '책임 주체'였다.

하지만 진보정당 건설 이후, 특히 원내진출에 성공한 이후의 현실은 노회찬의 기대와 달랐다. 조직노동세력은 소외된 노동의 보호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지 못했고, 진보정당은 조직노동을 그런 방향으로 견인하지 못했다. 결국 민주노동당은 노동귀족집단, 집단이기주의 세력 등의 비판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조직노동세력과 등치되어 '민주노총당'으로 간주되었다.

그럼 이를 방지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회찬의 역할은 어떠했는가? 당적 차원에서 노회찬의 역할이 제대로 전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국회의원이 된 노회찬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재벌대기업과 검찰권력의 유착,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같은 전통적 진보 의제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쳤고, 국회의원이 당 지도부를 맡을 수 없게 한 당내 제도 때문에 당 노선의 수립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즉, 소외된 노동의 보호와 정치주체화 등을 기본 노선으로 관철시키는 당 안팎의 실천이 눈에 띠지 않는다. 이는 결론적으로 노회찬이 신노선에 입각해 진보정당의 건설을 우선시하고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과 마찬가지로 진보개념의 재구성과 그것의 실제 발현에도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바로 이때 주목해야 하는 것이 '정파 문제'이다.

노회찬은 진보정당의 건설을 위해 조직노동만이 아니라, 1980년대 반독재민주변혁운동 과정에서 형성된 정파운동세력들의 참여도 적극 이끌어냈다. 진보정당의 건설을 위

해서는 사회운동적 자원의 총동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조직 노동을 동원할 때와 유사한 또 다른 딜레마를 발생시켰다. 정파운동세력의 참여 없이는 정당의 일상적 활동을 위한 정치역량 확보가 어려웠고, 정파운동세력이 참여하면 정당 활동이 당 내부 정치에 간혀 대중적 지지의 확장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때도 노회찬의 선택은 전자였는데, 그는 원내진출을 통해 대중들과 접촉면이 넓어짐으로써 민족해방파(자주파) 혹은 민중민주파(평등파)같은 정파의 이념과 조직 틀이 유지되기 어렵고, 그래서 대중정치에 걸맞는 방식으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주관적 기대에 불과했다. 정파운동세력들은 조직노동세력과 정파 간의 연합을 통해 세를 불리며 정파의 당내 조직적 기반과 정체성을 오히려 더 강화했다. 결국 정파 간 치열한 당권경쟁이 이어진 가운데 다수파의 패권주의가 등장했고, 2007년 대선에서 코리아연방공화국이라는 슬로건 표방을 둘러싸고 양대 정파인 자주파와 평등파 간의 갈등이 종북주의 논란을 가져와 분당 사태로 귀결되었다(조현연, 2009). 이때에도 노회찬은 별다른 관여를 하지 못했다.

진보정당 건설을 주도했음에도 노회찬은 당내에서 다수파를 점한 적이 없었다. 즉, 그는 당내의 조직 노동과 정파 세력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흥미로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회찬은 조직 노동과 정파 세력을 중심으로 다수를 점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권이나 당내 대선 후보 경쟁 등에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또 대체로 열세를 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고수한 당내 정치의 원칙이었다. 극복해야 할 대상을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삼지 않으려는 의식적 실천이었다. 규범적 측면에서는 타당한 판단과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노동과 진보개념의 재구성을 위한 조직노동과 정파운동세력의 극복에 필요한 현실적 수단을 확보할 수 없는 노회찬 노선의 한계를 의미했고, 결국 노동존중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주체형성의 딜레마를 해소하는데 실패했음을 의미했다.

이후에도 한국의 진보정당(들)은 노동존중의 가치를 내려놓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다시금 조직노동과 정파운동세력에 기대어 통합진보당을 구성했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역대 최대 의석(13석)을 확보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18대 총선에서 낙선했던 노회찬도 재선에 성공하며 다시 의회정치 일선에 복귀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나자마자 정파갈등이 다시 터져 나왔고 전당대회 폭력사태까지 겪으며 분당사태를 반복했다.

통합진보당의 분당 이후 노회찬은 진보정의당(현 정의당)의 창당을 주도해 당 (공동

혹은 단독) 대표를 역임했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3선에 성공한 이후 원내대표를 맡아 의회정치 최전선에서 진보정당 활동을 지속하였다. 그런 중에 조직노동 및 정파운동세력과의 거리는 멀어졌다. 하지만 이는 딜레마의 해소와 한계의 극복 차원에서 내려진 판단과 선택의 결과가 아니었다. 진보정당에 대한 조직노동(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철회와 별개의 진보정당들(정의당-노동당-진보당-녹색당 등으로)로 분열 혹은 분화된 정파구도 및 지형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진보정당이 노동존중의 정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조직노동과 정파운동세력을 대체하는 새로운 주체형성의 노선이 시급했다. 노회찬의 6411 연설은 바로 그 와중에 이루어졌다. 즉, 노회찬의 6411 연설은 오래된 것은 죽어가고 있으나,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못한 상황, 즉 위기의 산물이었다. 그리고 노회찬 6411 정신이란 용어가 정의당 주도로 등장한 것은 그의 죽음으로 진보정당의 위기가 지속된 것의 대응이었다.

IV. 노동존중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진보)정치의 인문화’ 시도

1. 노회찬 6411 정신의 한국 (진보)정치사적 의미

노회찬은 2012년 진보정의당(현 정의당) 출범 당시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로 시작하는 연설을 했다. 노회찬은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들 명단이 들어있던 안기부 x파일 폭로와 관련해 통신비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직후, 2013년 7월 21일의 전당대회 당 대표 사퇴 연설에서도 6411번 버스 이야기를 꺼냈다.

6411번 버스는 새벽 4시 정각에 출발합니다. 새벽 4시에 출발하는 그 버스와 4시 5분경에 출발하는 두 번째 버스는 매일 같은 사람들이 같은 정류소에서 타고 같은 곳에서 내립니다. 이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 버스를 타고 새벽 5시 반이면 직장인 강남의 빌딩에 출근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냥 청소하는 미화원일 뿐입니다. 한 달에 92만원 받는 이분들은 투명 인간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투명인간들입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그 고압선 철탑 위에 올라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4명씩 죽어나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용산 남일당 그 건물에서 사라져간 다섯 분도 투명인간입니다. 이들은 아홉시 뉴스도 보지 못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노회찬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의 삶이 고단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겠습니까? 이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찾을 때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 눈앞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손이 닿는 곳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에 과연 있었습니까? 내일 새벽에도 6411번 버스는 정해진 시각에 출발합니다. 수많은 투명인간들이 여전히 피곤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한다고 목소리 높여 외치지만 이분들이 필요로 할 때 이분들이 손에 닿는 거리에 아직 우리는 없었습니다(2012년 진보정의당 당 대표 수락 연설).⁶⁾

이 연설에 기반해 그의 사후 ‘노회찬 정신’ 혹은 (노회찬의) ‘6411 정신’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이는 진보정치는 물론,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매우 특수한 의미를 갖는다. 진보정치진영에서도 인물의 이름으로 표현되는, 그 계승자들이 추종하고 지향해야 할 이상과 원칙의 상징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 같은 ‘주의’가 아닌 ‘정신’이라는 보다 추상적인 방식으로 명명되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주의보다 정신이 더 추상적인 표현인 이유는 주의는 정치-사회경제적 실천 노선의 개념으로서 자체에 역사적 경험을 통해 시도되었거나 확인한 정책과 행동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정신은 형이상학적 개념이거나 일상적 표현이다. 그리고 물질, 육체 등에 대비되어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신비한) 힘의 작용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그 의미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해석적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한국 현대정치에서 민주당계열 정당을 중심으로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김근태 정신이라는 표현이 있다. 사회운동영역에서는 전태일 정신을 비롯한 ‘열사의 정신(뜻)’ 등이 있었다. 반면에 권위주의 혹은 독재세력과 수구보수 진영의 정치세력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다만 ‘박정희주의’가 있을 따름이다. 박정희주의의 하위개념쯤으로 위치 지을 수 있는 ‘새마을 정신’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근면-자조-협동과 같은 행동규범으로 채워진 그 정신은 국가주도 경제성장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로 작용하였고, 박정희라는 인물의 이름으로 표현되지 않았다.

진보정치세력에게도 ‘정신’이라는 표현은 낯설다. 진보정치세력에게는 주의가 훨씬 익숙하다. 익숙할 정도가 아니라 지배적이다. 그런 중에 정신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전태일 정신을 제외하면 노회찬 정신이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정신이라는 표현은 그 담지자의 ‘죽음’ 이후, 즉 물질성과 육체성의 소멸 이후에 붙여진다. 또 계승해야 할 이상과 원칙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지배 권력에 대해 저항함으로써 고난을 겪었던 자에게 붙여진다. 또 그를 (고난마저도) 계승하는 (그래서 새

6)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5112.html>.

로운 세상을 열어야 하는) 세력이 존재할 때 붙여진다. 박정희 정신이라는 표현이 없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지배자였던 박정희에게는 저항과 고난의 삶이 없고, 방어하고 미화해야 할 ‘과거’는 존재하지만, 계승할 세력도 싸워 이겨 이뤄야 할 세상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할 때, 진보정치진영에서도 노회찬 정신이라는 표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요건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노회찬은 저항과 고난이 배어있는 삶을 겪었고, 그의 죽음으로도 이루지 못한 이상과 원칙이 남아 있으며, 그것을 계승하겠다는 세력이 존재한다.

2. 노회찬 6411 정신의 ‘인문적’ 특성

1) 제도화 이후의 진보정치에 대한 자기반성과 성찰

그런데 이때 던져야 할 물음이 있다. 왜 하필 죽음 뒤에 남겨진 노회찬의 후배들, 즉 진보정치세력이 ‘노회찬 정신’(6411 정신)을 들고 나왔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회찬 정신, 6411 정신으로 이름 붙여야만 하는 혹은 그것을 가능케하는 상황과 맥락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 상황과 맥락은 앞서 3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도화를 이룬 진보정치세력의 ‘성장 지체’이다. 그리고 이를 가장 앞장서서 문제 삼고, 그것의 이유와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 이가 바로 노회찬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압축한 담론적 실천이 바로 6411 연설이었기 때문이다. 이때 연설이 진보정의당의 대표직 수락, 또 의원직 상실에 따른 대표직 사임사였다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 자신이 책임져야 할 어떤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었을 때 행해졌다는 것이고, 그것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행해졌다는 것이다.

이 시기 노회찬은 진보정치를 위기로 규정했다(노회찬·홍세화 외, 2010; 노회찬·구영식, 2014). 원내진출에 성공하고 제도정치세력으로 안착했으나, 그 이후 새로운 활로를 찾지 못하고 그저 군소 기성 정당으로 고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연이은 분당 사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빈약한 자원을 둘러싼 정파갈등만 거세지면서 2004년 원내진출을 가능케했던 사회운동자원의 총동원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조현연, 2009; 김윤철,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정치의 새로운 주체, 이념, 전략 등은 만들어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6411 정신의 의미 구성의 기원인 노회찬의 연설(“6411번 버스를 아시나요”)은 그런

상황과 맥락에서 나왔다. 이 연설의 핵심 메시지는 반성과 성찰, 즉 ‘내 탓’이다. 지역 주의도, 양당우위체제도, 단순다수대표 선거제도도, 정파갈등도, 정권과 제1야당도 탓하지 않았다.

2) ‘계급 이하의 존재’에 대한 (재)호명과 인간존엄성의 강조

6411 연설은 진보정당 제도화 이후의 반성과 성찰을 담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 내용적 측면에서 6411 연설이 세간에 회자될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그의 사후 6411 정신이라고 이름 붙여질 수 있었던 것은 반성과 성찰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해야만 하는 이유의 타당성이다.

6411 연설은 진보정치마저 다가가지 않았던 이들, 그래서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고, 인간과 시민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유령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이들을 (재)호출했다. 즉, 그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그리고 그들의 고단한 일상적 삶에 주목했다. 이들은 노조나 사회운동네트워크라는 재화를 전혀 보유하지 못한 존재다. 오로지 개인의 불안정 노동에만 의존해야 하는 존재다. 그래서 계급 이하의 존재 (underclass)이다. 유령으로 부른 6411 탑승객은 그런 고단한 처지에 놓여 있는 자들의 메타포다.

노회찬은 6411 연설에서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과 같은 거창한 슬로건을 내세우지 않았다. 분단의 해소, 주한미군 철수, 재벌해체(개혁) 등을 외치지도 않았다. 평등과 공정과 정의와 같은 추상적 가치를 앞세워 말을 걸지도 않았다. 7공화국 건설과 같은 거대 비전도 제시하지 않았다.

제도화 이후의 진보정당을 또다시 책임져야했던 후기 노회찬 정치의 특성은 여기서 나온다. 체제개혁과 같은 거창함의 정치가 아니라, 유령으로 살아가야하는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에 초점을 맞춘 ‘삶의 정치’다.

이는 노동자와 서민의 정당을 자처했던 진보정치세력에게 결코 새롭지 않다(바로 이 점 때문에 반성과 성찰을 필요로 했다). 그런데도 그것을 반복한 6411 연설이 당 안팎으로 공감을 얻고, 세간에 회자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또 죽음 이후 노회찬 정신과 6411 정신으로 새롭게 일컬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진보정치 밖의 사람들’마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진보정치관에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는 진보의 정체성이 자신들이 추종하는 고유한 이념이나 정책이 아니라, 세상의 보통사람들과의 인식과 시각에서 나온다는 것을 노회찬과 6411 연설이 다시금

알려주었음을 의미한다. 바로 이것이 6411 연설이 세간에 회자될 수 있게 한 이유이며, 그의 죽음 이후 진보가 계승해야 할 정신으로 불려질 수 있는 이유이다.

한편 6411 정신의 적절성은 한국의 진보정치세력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었다. 고학력 엘리트가 주도하는 중상층 중심의 정치를 펼치다 노동약자 등에 기반한 극우포퓰리즘의 발흥을 막지 못하고, 포스트민주주의의 등장에 합류한 유럽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한계와 오류(Piketty, 2020; Crouch, 2008)를 성찰한 것이기도 하다.

3) 서사성의 발현을 통한 새로운 진보정체성 구성의 가능성 제시

주지하다시피 6411 정신은 노회찬의 연설에서 비롯되었다. 이 점에 또한 주목해야 한다. 연설은 서사의 구성과 제시가 가능한 정치실천의 형태와 방식이다.

정치실천에 있어 중요한 것은 텍스트라기보다는 맥락이다. 텍스트와 같은 것으로 혼동되는 콘텐츠는 바로 그 맥락에서 나온다. 강령이나 공약으로 표현된 이념과 정책은 텍스트에 불과하다. 소통과 공감의 현장성, 현재성이 없어 ‘문자 그대로’ 수용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공감의 지대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반면에 연설은 맥락을 담고 있으며, 전달에 용이한 콘텐츠, 즉 이야기를 담아 서사성을 띠 수 있다.

6411 정신이 연설의 서사성에 기초해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정신이라는 모호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유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주인공)의 ‘떠남(출근)과 돌아옴(퇴근)’이라는 전형적 서사 구조에 기반해 있음으로써 이미지 형성이 쉽고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때문에 많은 사람들, 특히 진보정당 활동가들이 정신의 정체가 뭐냐고 그 의미를 따져 묻지 않는다. 또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친서민적 이미지를 조성하고 싶은 정치인들과 관료들(노회찬의 계승자들을 포함해 현 정부의 경제수장인 홍남기와 서울시장 후보였던 박영선 등)이 6411번 버스를 체험의 공간으로 겪어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동시에 6411 연설과 정신의 서사성은 진보정치세력이 자신과 타 정치세력, 특히 김대중-김근태-노무현 정신의 계승자임을 자처하는 세력과 구별 짓게 한다. 김대중-김근태-노무현 정신은 영웅적 서사인데 반해, 6411 정신은 노회찬 정신이라고 불려질 때조차 민중적 서사이기 때문이다. 즉, 이야기의 주인공이 다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을 보수마저 수용한 상황에서, 또 민주당계열의 정치세력이 진보라는 이름표를 달은 상황에서, 노회찬의 6411 정신을 계승하는 정치세력이 어디서, 어떻게 진보정치세력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할지 알려준다. 즉, 작금의 정치현실에서는 이야기의 창출

과 들려줌이 정체성을 형성하고 드러내는 실천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V. 나오며

노회찬의 진보정당 활동은 노동존중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치적 주체 형성과 관련해 딜레마를 드러내주었다. 노회찬은 1980년대 반독재민주변혁운동과정과 민주화 이후 형성되고 성장한 정파운동세력과 조직노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노선을 채택했다. 하지만 결국 정파운동세력과 조직노동에 기반해 진보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를 통해 노회찬과 진보정당은 원내진출까지는 성공했으나, 조직노동과 함께 점차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고 정파갈등의 심화와 연이은 분당 사태를 겪으며 성장 지체의 상황에 처해졌다.

노회찬의 6411 정신은 바로 그와 같은 진보정치의 역사적 맥락에서 나왔다. 노회찬의 6411 정신의 (진보)정치사적 의미는 진보가 주의로 표현되는 이념과 정책과 같은 프로그램이 아닌, 진보정당 활동이 낳은 리더의 이름과 활동에 기대어 정체성을 구성하려는 새로운 시도라는 데에 있다. 특히 노회찬의 정치연설에 기원을 둔 6411 정신은 성찰성과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노동약자의 인간존엄성에 대한 재강조, 그리고 서사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의 인문화 시도 혹은 인문정치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6411 정신이 노회찬의 진보정당 활동이 겪은 딜레마를 해소하고 노동존중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진보정치 성장의 실질적인 계기와 동력으로 작용해갈지는 미지수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6411 연설과 정신의 콘텐츠가 내장한 한계에서 비롯된다.

첫째, 6411 연설과 정신이 호명한 계급 이하의 존재들을 여전히 정치적 주체가 아니라, 호민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는 노동존중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치주체를 조직노동과 정파운동세력에게서 떨어져 나와 여전히 남아있는 자신들(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진보정당들)로 한정시켜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여전히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정치적 학습과 단련의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계급 이하의 존재들의 삶의 처지를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특히 노회찬이 끝까지 몸담았던 정의당의 경우) 쇠신이라는 미명 하에 탈근대적-탈물질적 이념과 가치(양성평등과 생태주의)를 중시하는 고학력-중산층 출신의 청년엘리트들을 주요 정치역량으로 영입 육성하는데 기울이는 노력에 비해, 계급 이하

의 존재들을 정치적 주체로 세워내는 노력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상기하면 호민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자각과 의식적 실천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빈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메타포임에도 불구하고 ‘6411번 버스의 탑승객’이라는 실재하는 사람들을 정신의 이름(기표)으로 삼음으로써, 진보정당이 노동존중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기치 하에 정치주체로 세워 내거나 우선 보호해야 할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 이는 노회찬의 계승자들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지점인데, 그들의 삶의 처지를 개선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이용만 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노회찬 재단이 실시한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6411 탑승객들이 “유명해지긴 했으나, 아무 것도 바뀐 것은 없다”고 소회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⁷⁾ 동시에 6411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하고 주체로 세워낼 인구집단과 개인을 확장하지 못하거나, 그 시기가 계속 지체된다면 지난 시기의 딜레마에 다시금 빠져들 공산이 크다. 지금처럼 청년 엘리트들 주도의 일시적인 선거-의회정치의 성과, 그것도 입법 성과가 아닌 법안 발의 성과와 입법 좌절에 대한 문제제기와 항의에 기대어 연명해 가는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6411 정신의 긍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약자들의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명하고, 그들 스스로가 삶의 처지를 개선해나가는 주인공으로 형상화되는 서사의 발굴과 창출이 필요하다. 결국 노회찬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계승자들 역시 자신들의 6411번 버스를 찾아 타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진보정당의 구체적인 정책과 행동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는 전략적 실천이 시도되어야 한다. 즉, 6411 정신이 그저 고상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정치경쟁력 강화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제대로 수행되어 일정한 성과를 이룬다면, 진보정당만의 성장이 아닌 양대 주요 정당들의 혁신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이는 유럽의 사회민주당 계열 정당들이 68혁명 이후 불어 닥친 신사회 운동의 도전에 영향 받아 새로이 등장한 정치주체와 의제와 담론과 정책을 정당조직적 차원에서 포용했던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6411 정신은 그러한 경험의 현재적-미래적-한국적 버전 구성의 계기로 작용할 때, 의미를 극대화할 수 있다.

7) 이는 노회찬 재단의 기획실장 이00이 확인해주었다. 이00은 시민단체 활동가를 거쳐 진보정당의 중앙당직자와 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고, 현재 노회찬 재단의 ‘6411 정신’ 관련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윤철(2017), "1980년대 한국 진보정치세력의 정당정치관: '보수야당 비판론'과 '전위 정당론'을 중심으로", 『비교민주주의연구』, 13-1:29-58.
- 김윤철(2020), "한국 '불평등민주주의'의 정치사적 기원: 1991년 5월 투쟁 이후 노동-평등의 배제 과정을 중심으로", 『비교민주주의연구』, 16-2:133-160.
- 김윤철(2011), "민주동당의 분당", 『정당학회보』, 10-1:101-136.
- 노회찬(2019), 『노회찬, 함께 꾸는 꿈』, 서울: 후마니타스.
- 노회찬·구영식(2014), 『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 서울: 비아북.
- 노회찬·홍세화 외(2010), 『진보의 재탄생』, 서울:꾸리에.
-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저, 강상진·김재홍·이창우 옮김(2011),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 길.
- 유경순(2015), 『1980년대 변혁의 시간 전환의 기록1』, 서울: 봄날의 박씨.
- 이원영(2021), "민주화기념사업회와 'K-Democracy'",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Issue & Review on Democracy, 57:1-13.
- 임현진(2009), 『한국의 사회운동과 진보정당』,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조현연(2009), 『한국 진보정당운동사: 진보당에서 민주노동당 분당까지』, 서울: 후마니타스.
- 최장집(2013),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 서울: 후마니타스.
- 크라우치, 콜린(Collin Crouch) 저, 이한 옮김(2008), 『포스트민주주의』, 서울: 미지북스.
- 피케티, 토마(Tomas Piketty) 저, 안준범 옮김(2020), 『자본과 이데올로기』, 서울: 문학동네.
- Sasson, Donald(1996), 『One Hundred years of Socialism: The West European Left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The New Press.